

서울 주택 절반이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도심 속 섬'

슈퍼블록 주택지 364개소
전체주택시가지의 약 60%
"인구밀도 개념 정립 필요"

서울시내 주택시가지의 절반 이상이 슈퍼블록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블록 중 소형주택지는 인구 고밀화와 상업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아파트단지는 주변지역과 연결, 중심지의 형성 등 도시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고밀주거지구'를 도입해 초고밀지역을 관리하고 도시지원시설을 설치해 가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슈퍼블록 주택지는 364개소로 전체 주택시가지의 약 60%에 달한다. 이중 소형주택지형은 92개소(25%), 아파트단지형은 140개소(40%), 혼합형은 132개



소형주택지 슈퍼블록(왼쪽)과 아파트단지 슈퍼블록. /서울연구원

소(35%)로 집계됐다. 슈퍼블록은 근린 중심지와 초등학교, 공원 등을 갖춘 주거지 계획의 기본단위로 간선도로에 의해 둘러싸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주거건물이 80% 이상인 경우를 소형주택지형으로 분류하고 인구 밀도 분포를 살펴봤다. 서울시내 소형주택지 92곳 중 인구 밀

도가 고밀(450인/ha~650인/ha)인 지역은 48곳, 초고밀(650인/ha~850인/ha)인 지역은 5곳으로 과밀 지역이 전체의 57.6%(53곳)에 달했다.

소형주택지에 적절한 인구밀도인 450인/ha 이상인 곳이 절반을 넘어 고밀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제도에 따라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신

축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소형주택지는 높은 계획밀도 아래 다세대주택 재건축과 상업화가 진행돼 열악한 주거환경이 심화되고 있다"며 "인구밀도 개념을 정립해 밀도관리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초고밀지역의 관리수단으로서 '고밀주거지구'를 도입해 주차공간과 녹지를 확보하고 재건축 등 관리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슈퍼블록 주택지 중 아파트단지 필지가 80% 이상인 곳을 아파트단지형으로 분류했다. 서울시내에 140개(40%)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지구로 지정·개발된 압구정, 반포, 이촌, 서초, 잠실동 일대와 택지개발사업으로 들어선 목동, 상계, 개포, 고덕, 상암 일대가 여기

에 해당된다.

아파트단지형 슈퍼블록은 상업·준주거지역과 비주거용도가 5% 미만인 지역이 60개소로 전체(140개소)의 약 43%를 차지했다. 소형주택지의 비주거용도 비율이 평균 32%인 것과 비교하면 아파트단지는 도시 서비스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폐쇄적인 주거지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임희지 선임연구원은 "아파트단지형 슈퍼블록은 독립적인 주거지 성격이 강해 가로변 활력이 줄어들고 주변과 단절돼 도시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라며 "소형주택지의 상업화 비율이 약 30%인 것을 감안해 도시지원시설을 역세권과 가로변에 입지시켜 가로를 활성화하고 도시와 교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18만대로 확대

12.5만대분 2925억 추가 확보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경기도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12만5000대분 292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국 전체 추가 물량(34만6000대분 8625억원)의 34%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본예산에 이미 편성해 집행한 5만5000대분 1087억원을 합쳐 올해 모두 18만대분 401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추가 사업비 확보는 지난 3월 정부에 제출한 사업비 증액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현행 수도권 대기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국

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평·가평·연천지역 예산 97억원도 포함됐다.

사업비는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조기 폐차 비용(차종에 따라 165만 원부터 차등 지원)을 보조하고, 저감장치(DPF) 부착비용의 90%(차종에 따라 400만원부터)를 지원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내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평균치보다 1.7배가 많은 예산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투입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며 전국 최대 규모인 43만대(2018년 말 기준)에 이르는 5등급 노후경유차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정부에 사업비증액을 요청

하는 한편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에 대비 219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 대상 5등급 노후경유차(올해 6월 기준 35만대)가 많이 남아 있어 지금 추세라면 2021년이나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시군 지자체의 경우 조기 폐차는 신청순, DPF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생계형 영업용 대형 화물차를 우선해 지원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승용차들은 내년 이후에나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달 안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지원계획을 재공고할 계획이라며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경기 의정부=김승열 기자 kimsy@



말뚝 잇게 하는 시원한 물놀이 휴일이자 말뚝인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붉은 수돗물 사태 방지 '총력'

노후 상수도관 1.75km 연내 교체

서울시는 영등포구 문래동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영등포구청역~도림교간 노후 상수도관 1.75km 교체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구간의 상수도관은 1973년 부설돼 47년이 경과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배수본관 노후화로 이물질 등이 사고지역에 장기간 침전돼 문래동에서 '탁한 수돗물'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 50억원을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번에 정비하는 노후 상수도관은 양평1동, 당산1동, 문래동 지역 약 3만1000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수관이다. 그간 유수율 증대 등 급수환경 변화에 따라 새 상수도관 직경을 700~800mm



노후 상수도관 정비 모습. /서울시

m에서 500~800mm로 축소해 정비할 계획이다.

자재는 기존 도복장강관(콜탈에나멜강관)에서 부식에 강한 내식성관인 덕타일주철관으로 시공한다. 시는 수계전환이 완료돼 단수로 인한 급수불편 없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산로, 경인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에 공사를 진행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지원 '친환경 화장품 용기' 세계에서 주목받아

경기도가 지원한 '친환경 화장품 용기'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는 지난해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융합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도내기업(썬이너보틀)이 개발한 '친환경 화장품 용기'가 '2019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컨셉디자인 부문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독일 IF,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페라리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수상한 바 있다.

이로써 도는 지난 2016년(썬유니테코)의 방사선 물질 자동분배기, 지난 2017년(썬개선스포츠)의 스피닝바이크에 세 번째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을 배출하게 됐다. /경기=김승열기자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추가 선정나서

최대 3년간 2억85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 '도시재생기업'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기업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진행 단계에 참여하고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찾아 기획·실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도시재생기업의 목적과 사업 내

용에 따라 '지역관리형'과 '지역사업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최대 3년간 8000만~2억8500만원의 초기자금을 마중물로 지원한다.

지역문제 해결 서비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 인프라 관리, 주거지 관리(주택 수리) 등 지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업 대상이다.

시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윤의 3분의 1 이상을 주민협약체에 지원하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조건을 뒀다. 초기 사업 자금은 사업장·사무공간 조성, 사업 개발, 교육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내일까지 이틀간 서울서 '국제여성포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2~13일 '베이징+25주년 기념 베이징행동강령 주요 분야 이행 점검 국제여성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베이징행동강령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위

해 우선으로 보장돼야 할 12개 분야(교육, 건강, 폭력, 전쟁, 경제 등) 361개 행동강령을 뜻한다.

베이징행동강령 발표 25주년을 기념해 서울, 베이징, 도쿄 등 동북아시아 3개 도시의 여성 활동가, 여성정책 전문가 등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김현정 기자